

# “어려워진 국비확보... 초당적 협력으로 최대의 성과 내자”

## 광주시·전남도, 국회의원 23명 참석 최대 규모 '정책간담회'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광주·전남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서울에서 '도시락 회동'을 하고 지역 현안해결과 내년 예산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낙연 전남지사가 광주·전남 합동회의를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광주·전남지역구 의원 18명 가운데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을 제외한 전원 참석했다.

또한, 새누리당 조훈현, 국민의당 이동섭·최도자, 정의당 윤소하·추혜선 등 광주·전남지역 출신 비례대표 의원 6명과 유운근 국회 사무총장까지 참석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이날 윤 시장과 이 지사는 지역 현안과 국비확보 과정에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의원들은 “광주·전남 발전을 위해서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돕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자동차밸리와 에너지밸리,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등의 국비 확보에 중점을 뒀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내면세점 유치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지역현안 7건과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74억원)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403억원)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15억원) 등 국고지원 요청사업 25건을 건의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 구조조정과 신규사업 역제로 내년도 국비확보가 쉽지 않고, 지역 현안에 대해 정부 측이 적

## 새누리 조훈현 등 비례 6명 참석 시·도 상생 현안 31건 협조 요청

국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지역 국회의원 및 여야가 긴밀히 협력해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조선산업 등 주력산업 고용 안정과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우 노선 조기 확정,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의 ‘광역만권경제자유구역’ 편입, 신안경찰서 신설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해조류산업 육성법,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 등의 조기 제정도 건의했다.

아울러 광주·전남 상생협력차원에서 ▲영산강 수질 개선 및 생태기능 복원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사업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광주 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 ▲광주 분량~장성 신원 구간 광주 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에 대한 관심도 부탁했다. 이밖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에너지 신산업관련 미래성장동력 이산화탄소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 구축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구축 등 주요 국고 지원 현안사업 31건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이낙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광주와 전남 발전

## ■광주시·전남도 건의사항

주요지역현안	국비지원
□ 광주시	·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 5·18 특별법 개정	·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 시내면세점 유치	·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 광주 공공청 이전	
□ 전남도	
·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우	·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 조기확정	·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 조기 제정	
· 조선산업 등 주력산업	
· 고용 안정	

을 위해 지역구이든지, 비례대표이든지, 어느 당 소속이든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지역 현안사업이 국가 계획과 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시장과 이 지사는 이날 간담회를 전후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광복 행보를 벌였다. 윤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주선·심재철 국회의부장 등을 잇달아 면담하고 광주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 지사도 정세균 국회의장 면담을 시작으로 김현미 예결위원장, 박주선 국회 부의장,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등 상임위원장단, 김춘순 국회 예결위 수석까지 연쇄 면담 지원을 당부했다. /최현백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정치권·지역 농민 전남 출신 김병원 농협회장 공정수사 촉구

# “호남출신 이유 차별 안된다”

“최초의 호남 출신 농협중앙회장인 김병원 회장에 대해 조사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김병원(63) 농협 회장의 검찰 조사와 관련해 최근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과 지역민들은 호남에서 탄생 한 첫 농협 중앙회장을 흔들기 위한 표적 수사를 우려하고 있다.

5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최근 검찰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투표 당일 낙선한 모 후보 명의로 지지문자가 뿌려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동안 농협 선거에서 낙선 후보자들 간 지지행위는 통상 있었음에도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지원 “낙선 후보자간 지지행위 관례”

## 이상호 “과거 영남 후보들도 합종연횡”

## 지역농협 조합원들도 착잡한 심정 표출

## 간선제 전환 농협법 개정 추진도 눈총

이어 “최초의 호남 출신 농협중앙회장인 김 회장에 대한 수사가 또 다른 별건 수사로 이어질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앞서 지난 4일 농협회장선거 수사와 관련된 논평에서 “우리 국민의당은 검찰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통해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붙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한다”며 “검찰은 이러한 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정당의 대선 후보 혹은 당대표 경선에서 불 수 있듯이 탈락한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정치 행위로, 기존의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도 지지자 결집을 위한 후보 간 지지행위는 여러 번 있어 왔다”면서 “검찰은 유독 이번 농협회장선거에서는 후보 간의 통상적인 지지행위마저 부정선거로 간주하고 수십 명의 조합장을 소환하는 등 이례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원내대표도 지난 1일 “김병원 농협회장 후보의 합종연횡이 수사대상이 돼 농협 수장이 검찰에 불려나가는 것을

보는 호남분들은 과거 영남 출신 후보들도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호남 출신이기에 괴롭힌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다”면서 “검찰이 보다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치권 뿐 아니라 지역 농심도 들끓고 있다. 고흥군 포두면 김근호(43)씨는 “국내 농업의 중심은 예나 지금이나 전라도지만 그동안 농협 중앙회는 모두 영남과 다른 지역 차지였다”면서 “이제 한 번 전라도 회장이 탄생하니 큰 잘못을 저지른 것 처럼 취임 초기부터 압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올 1월 12일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 직전 제3지역을 통해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에선 합천군이농협 조합장 최덕규 후보, 김병원 후보,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출신 이상희 후보 등 세 명이 맞붙었다.

1차 투표에선 이 후보가 1위, 김 후보가 2위로 각각 결선에 올랐다. 결선에선 김 후보가 막판 뒤집기로 이 후보를 따돌리고 회장에 당선됐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지지를 얻고자 최씨 측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이나 보석 등 대가를 약속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회장은 이 같은 ‘밀어주기’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하다.

김 회장은 2007년 당시 1차 투표에서 1위를 했지만 결선에서 최원병 회장에 패했다. 1차 투표에서 1위를 하고도 1차 낙선자들이 지역·학연 등으로 엮여 표가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 2차 투표에서는 1~2 위간 표차가 역전됐다.

또 김 회장의 당선 이후 정부가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호선제 실시, 특례조항 삭제 등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할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정부는 현재 대의원조합장 300여 명이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출제가 아닌 농협중앙회 이사 20여명이 호선에 선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농협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 농협 한 관계자는 “호남출신인 중앙회장에 오르자마자 농협법을 바꾸고 일종의 선거 관행을 문체 삼아 조사를 하는 것은 과거 영남 중앙회장 시절과 비교한다면 분명 차별이다”면서 “오려 김 회장은 비서실장, 조합감사위원장, 농협은행장, 축산대표이사 등 대표이사급 7명 중에 4명을 영남 출신으로 임명하는 등 지역 색을 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시도 현안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지역출신 비례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현백기자 choi@kwangju.co.kr

##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채용 법제화해야”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등 국회서 3당 당론 채택 촉구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산) 등 혁신도시 지역국회의원과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혁신도시 지역 대학생들은 5일 국회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회장 김승수 전주시장)가 주관한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는 김승수 회장을 비롯해 이창희 진주시장, 박보생 김천시장, 원장목 원주시장, 이기훈 나주시장 등 혁신도시 단체인장들이 참석했다. 또 손 의원의 외에 정동영 의원(전주병

과 김부겸 의원(대구수성갑), 이철우 의원(김천), 김기선 의원(원주갑), 김광수 의원(전주갑), 정운천 의원(전주을), 송기현 의원(원주을), 안호영 의원(안주인안무주장수), 한승진 전북지역 총학생회 협의회의장, 이주현 동신대학교 총학생회장 등도 함께 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을 시급히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3당이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들어선

혁신도시 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13%에 불과해 지역에 실망을 주고 있다”며 “35% 이상 채용은 단순히 청년일자리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니만큼 3당이 당론으로 채택, 혁신도시 조성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발전 희망의 물꼬를 터 달라”고 호소했다.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장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실과 정책위원장을 방문, 취지를 설명하고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중-30812호

#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406-중-81650호  
www.sejonghospi.com

# 세종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

## 진료내용

###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작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두현 원장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수신경계: 외상성척수손상, 척수종양, 척수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 세종요양병원

장기요양·수술후 재활·임케어병동·치매·중풍·집중치료실·인공신장실 대표전화 (062)236-5200  
의사·한의학 협력 진료 병원

▲전남대병원에서 광주천변 방향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